

통일부 장관, 이재명 정부 1년 「한반도 평화공존 정책」 점검 및 발전 전략 모색

- 「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」 제4차 회의 개최(6.17.) -

-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17일(수) 오전,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「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」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.
 -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,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,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보고, 최근의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공존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했다.
- 정 장관은 “최근 주요 정상외교가 일단락되고, 미국-이란 전쟁이 종결되면서, 다시 한반도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”며, “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고 우리가 상수인데, 주변국인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는 상황은 비극적”이라며, “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며, 하반기에 힘을 더욱 집중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자문단은 “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초기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위기관리 채널 구축에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”고 평가하며, “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메시지를 북한과 주변국에 일관되게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 - 자문단은 “한반도 정세 변화의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예측하며 관련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고, 한중-한러 관계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”고 하면서, 통일부가 한반도 상황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.

□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전략을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화해 나갈 예정이다.

붙임 : 회의 사진(별송)

담당 부서	한반도평화경청단 평화공존담당관실	책임자	담당관	이혜옥 (02-2100-5451)
		담당자	사무관	윤현주 (02-2100-5452)

